

2005 정기단체교섭

2005년 10월 24일 월요일 | 발행인 김영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 (우) 140-013 | 전화 (02)3780-5980 (철도)921-5980 | FAX (02)3780-5971 | 홈페이지 http://krwu.nodong.net 철도노보 2005 정기단체교섭 특별판 제 2호

10.29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20일 전국지부장회의, 지부별 현장순회 설명회 등 결의... 11월8일 임시대대 총력투쟁안 확정

철도노조는 20일 14시 충남 도고 한국증권업협회 연수원에서 이틀간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4차 본교섭까지의 교섭보고와 이후 총력투쟁 일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14시 비정규 교육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된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조합원 속에 정기단협에 대한 쟁점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쟁점을 해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현장지부를 비롯해서 전 조직이 좀더 발로 뛰며 설명회등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차량분야의 인턴투쟁과 KTX 여승무원 투쟁보고가 진행되었다. 유성주 시흥차량 지부장이 인턴투쟁 보고에서 "인턴으로 채용하면 3개월후 정식발령을 내렸다고 약속했던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가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겨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차량인턴 및 미발령자를 즉각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TX 여승무원 민세원 지부장은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인건가는 정규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철도유통이라는 이름은 보았지만 그냥 철도직원인 줄 알았지 자회사 직원이 될 줄 몰랐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철도노조 송덕원 기획국장이 4차 본교섭까지의 교섭보고와 김용전 조직실장이 총력투쟁 계획과 일정에 대해 기초발제를 하였고, 초청강사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비정규철폐와 노동자의 단결'이란 주제로 열린 강연을 하였다.

현장순회, 조합원설명회 강화하고 10월 29일 결의대회에 총력을 다하자!

저녁식사 후 두시간 동안 지방본부별 토론이 진행되고 다시 직종별 토론이 오후 10시반까지 이어졌다. 오후 10시반 전국지부장들은 다시 본회의실에 모여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토론결과 발표에서 지부장들은 대체로 "현장조합원 상황과 비교해 중앙집행부가 제출한 투쟁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전 조직이 다시한번 민주노조를 건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순회를 강화하고 조합원설명회 등을 통해 10월29일 제1차 총력결의대회에 최대한의 조합원들이 참여토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전국지부장들은 이날날 오전 정리토론과 결의의 시간을 가지고 10월 29일 총력결의대회를 힘있게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11월 1일 중앙위원회와 11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후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전국지부장회의를 마친 후 우수지부장들은 대전본사를 향의방문하고 문국역장 엄중 중징계를 촉구하였다.

지방본부별 토론결과 발표내용 정리

▷ 1주제 「교섭쟁점과 주요 쟁취목표는 무엇인가」

○ 핵심요구안이 부각되지 않는다 / 는 의견도 많았지만, / 현장조합원은 경력인정, 연금등 임금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인력, 해고지복직 등 쟁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며 대외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철도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 요구안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쟁취가능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자 / 는 의견도 많이 제출되었다.

▷ 2주제 「총력투쟁 계획 및 투쟁일정」

○ 대체로 / 투쟁일정이 촉박하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9일 집회일정이 빠르다. 조합원설명회나 현장순회를 할 시간이 별로 없다 / 민주노총 등의 투쟁일정에 맞춰 가는 것 아니냐 / 임금과 단협을 연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실천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 촉박하더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자. 지부장이 발로 뛰며 현장순회, 조합원설명회 등을 적극 진행하자 / 일정상에 무리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동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 현안투쟁이 단협투쟁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다 강한 투쟁입장을 견지하자 / 는 등의 의견도 많이 제출되었다.

▷ 3주제 「현장 조직상황은 어떠한가 현장동력 강화 방도는 무엇인가」

○ 현장조합원들이 자회사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경력인정, 연금, 수당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조합원속에 교섭쟁점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 현장지부에서 단협설명회 등이 개최되지 않는다 / 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 쟁점해설을 해야함에도 진행하지 않은 곳이 많다. 지부장이 현장 순회등을 통해 적극 조합원을 만나 가야 한다 / 중앙에서 실천단으로 지역순회를 강화하면 좋겠다 / 위원장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더욱 독려하자 / 는 등 많은 찬발적인 인들이 나왔다.

정기단협 투쟁일정

▷ 10월

- 24~28일 지부 교섭보고 설명회
- 29일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 31일 철도노조 지부간부 투쟁복 착용

▷ 11월

- 1일 중앙위원회, 노동조합 창립 기념행사
- 2~7일 중앙 및 지방간부 농성투쟁 돌입
- 8일 임시대의원대회(이후 투쟁일정 확정)
- ▷ 11월 8일 임시대대에서 정의발생 결의할 경우(안)
- 8일 정의대책위로 전환, 정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 9일 중앙 및 지방간부 현장순회
- 10~11일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쟁대위 전환)
- 13일 정기단협 승리 2차 총력결의대회
- 14일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 16~18일 정의행위 찬반투표
- 19일 지방본부 정의대책위 회의
- 22~23일 전국 5개권역 총력결의대회
- 24일 지부 쟁대위 철야농성, 지부 종식집회
- 25일 확대쟁의대책위회의
- 28일 준법투쟁 돌입
- 12월 1~3일 전국 5개권역 총력결의대회



10.29 가자! 대학로로

공공철도 사수를 위한 철도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국무총리도 인정한 고속철도 정책 실패를 정부는 철도에 부채로 전가했고, 철도공사는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수익추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특단협에서 약속했던 철도에 대한 정부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철도는 올해만 9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압박하고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0.29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는 철도에 대한 정부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편성시장을 통한 기회(예산차의 공기업 지배구조를 혁명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2005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의 깃발을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05 정기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2005년 10월 29일 14시 / 서울 대학로

05 단협 핵심 요구안

- 철도상업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 구조조정, 자회사 및 외주화 분쇄!
- 해고자 원직복직!
- 비정규직 차별철폐!
- 온전한 주5일제 쟁취로 실질휴일 확보!

직종분야별 현안요구

- 전 기: 무인화장 철폐! 외주화 및 자회사 철폐하라!
- 시 설: 근로기준법 준수! 체불임금 지불하라!
- 차 량: 인턴 및 미발령자 즉각 발령하라!
- 승 무: 근무체계 개편 조속 시행! 1인승무 반대!
- 운 수: 역 - 역 그룹화와 신설역 외주위탁 철폐하라! 역차 - 적정인력 확보 및 1인승무 철폐하라!
- 정비항: 사유화차 위탁검사 철폐하라!

10월 20일 전국지부장회의의 위원장 개회사

존경하는 지부장 동지여러분

존경하는 전국의 지부장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우리는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는 한편으로는 공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지부별 단결의 날 행사와 지방본부별 현장순회, 각종 교육등을 통해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지부장 수련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조합원들은 이번 정기단협의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여전히 임금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단협설명회를 하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일선 간부동지들의 호소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1개월여 간의 현장순회를 통해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05년 정기단협 승리는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이 쟁점이며 이것을 쟁취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어떻게 강화 발전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현장조합원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 갈 때만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조합원들이 쟁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하지 못할 뿐입니다.

임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임투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기단협은 결코 임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철도와 관련한 요구들이 쟁취되지 못하면 임투승리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측의 기본적인 지불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정기단협이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공기업 통폐합제를 분쇄하는 것이 임투승리의 전제이며 공사의 임금을 통한 개별적 구조조정 계획을 저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투쟁이라는 점을 우리는 교육하고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부장 동지여러분

저는 이번 현장순회를 통해 또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여전히 현장지부의 일상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뼈저리게 확인한 점입니다.

현장조합원들은 지부를 바로 노동조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부조합 위원장을 매일 볼 수도 없고 불만이 나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지부로 달려가거나 지부장님을 찾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활도 투쟁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조직이 바로 지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부가 잘 운영될 때는 노동조합 전체에 대한 신뢰는 높아집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불신이 현장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합원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번 투쟁에 운전에서 안사서만 난 죽어도 투쟁안한다". 또 한 신규자는 "경력인정 못받는 것이 사측에서 해줄라고 하는데도 노조가 들어서 그렇다네 사시입니까?". 어떤 일근자는 "위원장님 운전출신이라 기관사들만 왕창 임금올려주고 우리만 찬밥신세다". 어떤 조합원은 "위원장님이나 본부에 있는 사측간부들이나 다 일근하니가 일근자 중심으로 임금을 협상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비판은 우리 조직의 힘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렇게 왜곡된 정보속에서 방치된 채 자신들의 어려움의 근본원인을 타 직종으로 맞추거나 심지어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주 타직종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지부의 문제이자 과제입니다. 현장조합원 결에서 정확히 해설하고 올바른 투쟁동력을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주요한 임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민영화 저지! 2003년 일방적인 공사법 입법저지 등 중요한 투쟁에는 그에 걸맞는 확실한 전선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우리 투쟁의 대의명분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은 그러한 대의명분을 통해 정권과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역사를 개척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단체교섭의 전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노동조합 간부는 당면 투쟁에서 무엇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동지들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훈

정기단체교섭 무엇이 쟁점인가?

2005 정기단체교섭이 10월 18일 4차 본교섭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철도, 해고지원직복지, 인력충원 등 주요 요구안에 대해 노사간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월 7일 7차 본교섭을 진행한 후 11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교섭 결과와 쟁의발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은 노조측의 요구안과 공사측의 답변이다.

1. 공공철도 건설 요구

-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 철폐 요구 - PSO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동노력 하자.
- 적자선, 적자역 폐지 철폐 요구 - 역종전환, 열차횟수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지자체 등의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 열차안전 위협하는 업무축소 폐지(차량정비 축소, 신호장 무인화, 1인승무) 및 비정규직화(시설·전기 유지보수 의주화, 차량정비 의주화, 역업무 의주화) 철폐 요구 - 비핵심업무, 특수전문기술업무에 대해 추진중이며, 기술 개발과 업무개선에 따른 것이다.

- 주중 고속철도 요금 20% 인하 및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요금 50% 할인제도 도입 요구 - 각종 할인제도의 도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 자회사 정비 및 낙하산 인사 금지 요구 -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전문연구용역을 통하여 17개 출자회사의 통제할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혁명적이고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다만 수익형 자회사도 있었지만 위탁형 자회사에 관해서는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

2. 해고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요구

·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요구 -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 조치를 강구한다. (94년 1명, 공투보 2명, 2.25 해고자 중 해임자 6명 등 총 9명 거

론, 공사정관 등의 사규 적용문제와 구체적으로 6.28해고자들의 적용여부가 쟁점임)

3. 인력충원 요구

- 830명 현업배치 - 초기 직무진단에 따라 공사측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 본교섭에서 11월초에 공사측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본사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타사와 비교하여 본부인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불투명한 상황이다.
- 차량분야 미발령자 정원확보 요구(290명) - 총정원의 증원 요구는 수용불가하며 '결원 즉시 충원'하며 희망자의 경우 타직렬로 임용할 수 있다.

- 주5일제 필요인력 총원 요구(2,250명) - 수용불가하며 3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으로 마무리된 사항이다. (현재 필요성 조차 동의하고 있지 않음)
- 신규 필요인력 총원(전기 112명, 운수) - 특단협 인력합의에 포함된 인력이다.(이에 노조에서는 특단협 인력에 포함되지 여부도 다름의 여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채용된다면 신규소요인력으로 정원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4. 임금관련 요구

- 교대분야 지정휴일 실질화에 따른 수당 보전 - 수용 불가
- 교번근무자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특별인정시간 20시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2006년 별도 수당으로 전환하여 보전 - 수용불가

- 일근자의 임금 형평성 제고 - 수용불가
- 임금관련 요구안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은 근무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항이며, 현재 미협 상태이다. 교번과 관련하여 근무체계 개편 후 검토하지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협상에서 협의하지는 입장이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요구 - 팀장, 부역장, 관제사, 비정규직 등 쟁점
- 비정규직에게 동일기초노동 동일임금 지급, 인사·후생복지·여성·산업안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단체협약 적용 - 공사는 향후 제정 또는 개정될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 정규직의 고봉분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효력을 확장할 경우 단체협약서상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입장.

-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 현재 투쟁이 진행 중임.
- 차량인턴직 경력 100% 인정 요구 - 현재 투쟁이 진행 중임.
- 세부적인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사안별로 다루어야 하나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협 최종단계까지 다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 연금불이익 보전

- 국민연금 선택자 호봉 1호봉 동일 인정 요구 - 수용 불가. 공무원연금불이익 보전은 지난 특단협에서 공무원 연금특례 적용, 1호봉 승급, 정년연장, 임금인상률 등으로 마무리된 사항이다. 일시금 선택자의 불이익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대해 노조측은 개인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한 것

은 정부에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정부차원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노사가 보수, 복지등의 향상을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다. 지난 특단협에서 여러 제한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불이익이 있다면 공사가 보전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

7. 구조조정 저지

- 직무진단을 중단하고 적정인력 산정에 필요한 직무진단에 관여하는 노사공동으로 진행 - 수용불가. 연구용역일 뿐이며 이는 공사의 권한사항이며 제도개선은 조합과 협의하겠다.
- 이에 노조측은 핵심업무, 비핵심업무를 구분하고, 개인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 아웃소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 등 이미 결과를 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며, 적용

인력에 대한 용역은 노사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 현재 진행 중인 ERP 사업을 중단하고 노사합의 후 시행 요구 - 수용불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 이에 노조측은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실시간 노동통제이며, 실시간 노동통제는 인력감축과 노동통제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8. 경력환산

- 2005년 신규채용자 경력환산은 입사 당시 적용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을 적용해야 한다 - 공사는 처음에는 무리라도 답변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었다. 동종업체(유사) 경력과 관련해 2005 신규채용자에 대해 이전 재직자와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이후에는 적용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이후 채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공시안을 제출하겠다.
- 철도공사의 임시직 경력 역시 철도청 임시직 경력도 공히 인정되어야 한다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일반기업체(상장업체)의 경력과 관련해 신규채용자

에게는 적용되고 기존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체(상장업체) 경력의 재직자 적용은 무리이다. 재직자는 공무원때에 이미 적용기준에 의해 경력환산이 되어 호봉이 획정되었던 것이고, 2005년 신규채용자는 전환 당시 이러한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공지한 사항이다.

- 장기근속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인정범위에는 군복무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9. 대등한 노사관계 정립 요구

- 노조 전임자 : 공사측은 기획예산처 지침, 경영평가와 성과급, 정부투자기관 전임자 축소사태 등을 근거로 21명으로 축소 주장

- 고용과 관련된 사항 사전 합의 요구 :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인원감축 사전 합의 요구 :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근무체계 개편 요구

- 교번분야
 - 기본적인 노동시간, 휴일, 근무형태 등에 대해 3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됨
 - 동력차분야 - 교번작성 및 신규자 채용, 각 소속별 정원재산정, 특별인정시간 인정여부 등 12 초 개편될 근무체계 시행문제로 쟁점이 넘어 감.
 - 열차분야 - 승무원, 승무조 구성, 인정시간범위, 소요인력 등 쟁점.
 - 차량분야 - 기본 노동시간, 휴일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교섭진행 예상. 인정시간 등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쟁점이 될 것이며, 소요 필요인력에 대한 쟁점으로 인력충원, 업무축소, 임금보상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임.

- 교대분야
 - 3조2교대 근무자 지정휴일 3일 야간격일제 근무자 지정휴일 2일을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시키지 아니한다 - 3조2교대 개편을 통하여 주5일제 개편이 완료되었으며 과도한 요구이다.
 - 소요 인력요구(2,250명 총원요구) - 수용불가.

인턴 및 미발령자 즉각 임용하라

차량조합원 결의대회 300여명 참가, 정기단협 승리 투쟁결의!

철도노조 차량조합원들이 21일 14시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300여명이 참가하여 '차량 인턴 및 미발령자 즉각 임용과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전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기단협 투쟁의 파고를 더욱 힘차게 높여 나갔다.

박철수 차량분과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철도를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적으로 재편하려는 철도공사의 의도가 오늘의 우리 투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투쟁은 차량 구조 조정을 저지하는 문제이거나 철도현장의 잘못된 노사관계를 뜯어고치는 중요한 투쟁"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유성주 시흥차량 지부장은 인턴투쟁 경과보고를 하던

서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정기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철도공사는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진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인턴 및 미발령자들에게 대한 정규직화를 시행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철도공사를 응징하자"고 하였다.

철도해고지원직투쟁위원회 김갑수 대표는 투쟁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단협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다. 차량인턴 투쟁이 그 시발이 되고 있다"며 힘찬 투쟁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인턴 조합원들이 앞에 나서 "저희가 비록 침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였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단결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인턴사원이 정규직화 되는 데에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인턴사원들은 한결 같은 마음일 것이다. 빨리 발령 받았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집회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참가한 조합원들이 인턴 및 미발령자 즉각 임용의 요구와 투쟁의 결의를 쓴 종이비행기를 분사마당에 날리며 힘차게 마무리되었다.



철도·지하철 공공합인 축소 계획 철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공공합인제도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요

철도·지하철 공공합인 축소 철폐와 빈곤층 요구합인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여 관여하는 공공합인제도 축소계획 철폐와 공공합인제도 보장을 위한 제1차(11월) 투쟁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 장소 전국 주요역

우리의 요구

- 정부와 철도공사는 경로 및 장애인 할인 축소 계획을 철폐하고 청소년합인제도와 유아무임제도를 즉각 환원하라!
-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경영진은 노인, 장애인 무인승차 폐지기도를 철폐하라!
- 정부는 공공합인 보장과 사회적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법령과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빈곤층에 대한 철도·지하철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라!
- 유아무임과 공공합인제도를 보장하는 민주노동당 현역의원들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철도·지하철 공공합인 축소 철폐와 빈곤층 요구합인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여 관여하는 공공합인제도 축소계획 철폐와 공공합인제도 보장을 위한 제1차(11월) 투쟁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